

‘유동성 위기’ 광물자원공 합작사업 파트너 지분 인수

최근 암바토비와 볼레오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진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이들 지분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최근 합작사업 파트너가 돈을 갚지 못하자 대신 지분을 받았다. 광물자원공사와 함께 암바토비 사업을 추진하는 캐나다의 셰릿은 지난해 12월 12일 사업 파트너인 광물자원공사, 일본의 스미토모에게 자사 지분 28%를 넘겼다. 두 기업에게 빌린 13억 달러를 담보하기 위해서다. 만약 사업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광물자원공사만 위험 부담만 커질 수 있게 된 셈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광물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분 조정으로 셰릿의 지분 12.8%를 사실상 광물자원공사가 갖게 됐다.

사업 파트너인 이들 3사는 암바토비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을 보유 지분만큼 부담하기로 당초 계약했다.

광물자원공사와 스미토모는 셰릿이 최근 몇 년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투자금을 내지 못하자 그 돈을 대신 내왔는데 이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자 지분을 대신 받은 것이다.

광물자원공사가 셰릿에 빌려준 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5억3300만 달러다. 셰릿의 지분 15.2%는 스미토모가 인수하면서 현재 지분은 광물자원공사 40.3%, 스미토모 47.7%, 셰릿 12% 보유중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암바토비 사업에 2016년까지 15억 577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2430만 달러를 회수하는 데 그쳤다.

지분이 늘어나면 사업이 잘될 경우 더 많은 배당을 가져갈 수 있지만, 반대로 사업이 악화되면 손실도 커진다. 실제 암바토비 광산은 지난 5일 마다가스카르를 강타한 사이클론 ‘에이바(Ava)’로 일부 장비가 손상돼 생산이 중단됐으며 이달 말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다.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은 현지법인 MMB가 광물자원공사에서 빌린 돈의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MMB에 작년 말까지 9억4740만 달러를 대부투자 형태로 빌려줬지만, MMB는 작년까지 원리금 1억5590만 달러를 상환했을 뿐이다. 원래 MMB는 작년 원금 5400만 달러와 이자 470만 달러를 공사에 상환해야 했지만,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한줄 News

정치·사회

▲ 6·13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분주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사실상의 ‘통합선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학교 시설의 석면 해체와 제거 공사에 의한 주변 피해 우려에 따라 정부가 전국 초·중·고 석면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 서울시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흥행을 위한 ‘5대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산업

▲ 삼성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18’에서 선보인 마이크로 LED 기술 기반의 세계 최초 모듈러 TV ‘더 월’이 각종 상을 휩쓸었다.

▲ 최근 항공 여행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 수하물가방의 항공 운송이 일부 제한된다.

금융·부동산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우수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동탄2차 건복주택에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유통

▲ 지난해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 여파로 일반 계란보다 2배 가까이 비싼 고급 계란 수요가 급증했다.

▲ 식·음료 업계에서 국산 원료와 저칼로리를 강조한 다양한 신제품들이 잇달아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3개월 만에 하루 5兆 거래... 카카오의 힘!

가상화폐 거래소

국내 최대 거래 ‘업비트’

120만 회원·121개 코인 상장
美 거래소 비트렉스와 제휴
유동성 좋은 코인 우선 상장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다. 국내 다른 거래소 대비 출발이 늦은 후발주자지만 거래규모면에서는 이미 빗썸과 1위를 다투고 있다.

14일 업비트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회원수는 총 120만명이며,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이다. 하루 최대 거래액은 10조원이며, 지난달 일평균 거래액은 5조원에 달한다.

업비트는 아직 가상화폐 거래 정보사이트인 코인마켓캡, 코인힐스 등에는 등재되지 않아 공식 순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업비트의 거래 집계대로라면 국내 1위는 물론 세계 최대 거래량이다.

거래가 빠르게 늘면서 업비트는 출범 두 달 만에 1000대가 넘는 서버



를 확보해 운영 중이며, 계속 확장할 계획이다.

단기간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업비트의 장점은 다른 거래소 대비 압도적인 코인 수와 카카오 브랜드에 따른 친숙함이다.

업비트에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121개 코인이 상장돼 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렉스와 제휴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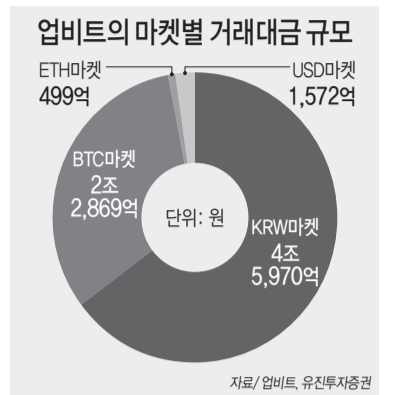
업비트 관계자는 “비트렉스는 상장 전 해당 가상화폐에 대한 법률적, 기술적 검증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업비트는 비트렉스의 심사가 완료된 가상화폐들 중에서도 유동성이 뒷받침되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을 우선적으로 상장해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마켓도 원화마켓, 비트코인마켓, 이더리움마켓, 테더마켓 등 4개를 운영 중이다. 원화마켓은 업비트가 단독 운영을, 기타마켓은 비트렉스 연동을 통해 제공한다.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손쉽게 계좌 개설과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주체는 두나무다. 카카오가 지분 약 23%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카카오의 두나무 지분율은 8.8%지만 카카오의 100% 자회사인 케이큐브벤처스가 두나무의 지분을 약 13.3% 보유하고 있으며, 카카오가 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청년창업펀드도 약 3.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계정이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도 간편한 ‘카카오페이 인증’을 이



용 중이다. 업비트는 증권 앱인 카카오스탁을 개발하고 운영한 두나무의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PC는 물론,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실거래가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나 계좌를 모니터링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락스클린, 실시간 알림 등 모바일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지원한다”며 “두나무가 운영중인 카카오스탁의 기술적 노하우를 활용해 증권 모바일트레이닝시스템(MTS) 수준의 거래 안정성과 편의성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t@metroseoul.co.kr

日도 규제 강화... 거래소 ‘사전등록 의무화’

한은 ‘해외경제 포커스’
日 당국, 최소한의 규범으로
시장육성·규제 균형 도모

국내 가상화폐 거래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금융당국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등 각종 규제책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최소한의 규범을 통해 가상통화 시장의 육성과 규제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최근 일본은 가상통화 취급업체에 대한 규제 도입과 상품 결제 점포 증가 등을 배경으로 가상통화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16년 말 1비트코인 당 968달

리에서 2017년 말 1만3860달러로 급등했다.

한은 조사국 관계자는 “일본에서 상품 구입 후 가상통화로 결제할 수 있는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며 “엔화와 비트코인 간 거래는 전 세계 비트코인 교환의 약 30~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 주요국은 가상통화의 거래 증가로 각종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아예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주요국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미국·캐나다·EU·일본), 자산관련세법 적용(미국·영국·독일·일본), 부가가치세 부과(독일·싱가폴), 증권법 적용(미국·싱가폴) 등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현재 가상통화거래 소(교환업자)의 금융청 사전 심사 및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거래소는 자본금 및 순자산 요건을 충족하고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이용자 재산의 분리 보관과 거래 시 본인 확인, 재무제표 외부감사 의무 등을 부과한다. 일본 국제청은 가상통화를 통해 얻은 이익을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잡소득)으로 규정하고 관련 소득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자진 신고를 요구하는 등 과세 방침을 보다 구체화했다.

일본 당국은 아울러 과도한 가격 변동의 주 요인으로 지적되는 레버리지 거래(차입거래)에 대한 규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향후에는 시세 조작, 내부자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업계의 자율규제 노

력을 지켜보며 추후 규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은 조사국 관계자는 “이는 안정적인 가상통화시장 형성과 발전 도모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이나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며 “가상통화의 규제 노력이 공적 보증 신호로 오인됨으로써 투기나 소비자 피해를 키울 소지가 있고 세원 포착이 어려운 가상통화의 특성을 감안할 때 납세 신고 회피나 과소 신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업계의 자율규제만으로는 시세 조작이나 내부자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정부 규제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봉준 기자 bj35sea@

축산 대기업의 방역 소홀이 키운 AI 사태

14건 중 9건 계열사 농장서 발생
수사 의뢰·이동 중지 명령 발령

축산 대기업들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소홀이 AI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AI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계열화사업자들의 책임있는 방역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 농가를 시작으로 지난 10일 전남 강진의 종오리 농가까지 총 14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60개 농가의 닭 90만 4000마리와 오리 68만6000마리 등 총



지난 10일 육군 제31보병사단 장병들이 전남 강진군 한 도로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9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이는 지난 2016년 발생한 사상 최악의 AI 사태와 비교하면 발생 건수가 매우 낮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실제 당시에는 50여 일간 무려 329건의 AI가 발생했었다.

하지만 올해 AI 발생 상황에서 주목되는 점은 14건 중 무려 9건이 계열사 소속 농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중 계열사 ‘다솜’ 소속 농장에서 4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사조하인’ 소속 농장에서 2건, ‘참프

레’, ‘성실농산’, ‘제이디팜’ 소속 농장에서 각각 1건씩 발생했다.

이처럼 AI 발생 농장의 대부분이 계열사 소속 농장인 것으로 확인되자 농식품부는 계열사가 방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수사 의뢰와 이동 중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실제, 농식품부는 지난 주 역학조사 결과, 다솜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의뢰했고 전국 제이디팜 계열사에 대해서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그 간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생 계열사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발령, 소속농가 일제 AI 검사 및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 중에 있다”며 “계열화사업자 관계자들은 차량 GPS 운영 점검 및 소속농가 출입 금지, 소독실태 점검 등에 보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